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마 경 희**

◀ 요약 ▶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정책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돌봄에 대한 윤리적·규범적 차원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돌봄 활동과 가치가 주변화 되지 않는 사회정책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이론적 주장을 하기 보다는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으로서의 실천적·규범적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돌봄과 정의의 관계를 둘러싼 여성주의 내부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의 쟁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사였던 돌봄(care)과 정의(justice)의 관계를 둘러싼 서구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돌봄에 대한 정치적 개념화를 통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모성주의(maternalism)와 자유주의의 돌봄과 정의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를 논의하고 돌봄을 권력관계의 맥락 내에 위치시키는 정치적 윤리가 돌봄 재편기 돌봄의 가치를 공적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윤리적·규범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과제번호: B00102, 과제명: 노인 돌봄의 경험과 관계적 자율성의 정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khee@kwidmail.re.kr).

이 글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한다.

1. 서론

출생과 동시에 직업을 얻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관 속으로 사라지는 인간도 없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기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 의존의 시기를 거치며, 나이가 들면 다시 새로운 돌봄 욕구에 직면하게 된다. ‘독립적’ 성인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조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 영구적인 장애로 타인의 돌봄에 의지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처럼 돌봄 욕구가 모든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들의 돌봄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왔고, 현재에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 전체에서 돌봄을 주고 받는 활동이 보편적이며, 그에 따른 의존이 인간 존재의 필연적 속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이해보다 타인의 욕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사랑의 노동’으로서 돌봄의 가치는 더 이상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일상적 삶, 문화, 제도, 정책, 나아가 주류 도덕이론과 정치이론에서 돌봄 욕구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독립적 인간’이라는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적 상태로 인식되고, 돌봄을 주고 받는 활동은 공적인 관심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개인적, 사적 문제로 주변화 되어 왔다.

그러나 돌봄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돌봄은 공적·사적, 공식·비공식, 유급·무급 등의 이원론적 경계를 해체하면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계, 그리고 돌봄이 배분되고 수행되는 규범적, 경제적, 사회적 준거틀로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복지국가의 변화와 발전을 포착하기 위한 중심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Daly and

Lewis, 2000; Williams, 2001). 사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돌봄이 이제 정치적 행위와 협상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Sevenhuijsen, 2003). 세븐휴이젠(Sevenhuijsen)은 돌봄이 공적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돌봄의 재편(relocation of care)으로 정의하면서 새로운 돌봄 실천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적 틀(new normative frameworks)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Sevenhuijsen, 2003). 같은 맥락에서 윌리엄스(Williams) 역시 돌봄 정책이 사회변혁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정치적 가치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Williams, 2001).

이 글은 그동안 국내 사회정책 연구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사였던 돌봄(care)¹⁾과 정의(justice)의 관계를 둘러싼 서구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돌봄에 대한 정치적 개념화를 통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모성주의(maternalism)와 자유주의의 돌봄과 정의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를 논의하고 돌봄을 권력관계의 맥락 내에 위치시키는 정치적 윤리가 돌봄 재편기 돌봄의 가치를 공적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윤리적·규범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정책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돌봄에 대한 윤리적·규범적 차원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돌봄 활동과 가치가 주변화되지 않는 사회정책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성의 일’과의 경험적 관련성으로 인해 돌봄이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중심적 연구 주제로 출발했지만, 이제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논의는 돌봄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정책, 복지국가, 나아가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한 중심적 의제로 돌봄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이 돌봄에 대한 사회정책 연구자와 여성주의 연구자들 간의 학제간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새로운 이론적 주장을 하기 보다는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으로서의 실천적·규범적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돌봄과 정의의 관계를 둘러싼 여성주의 내부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의 쟁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¹⁾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의 쟁점은 돌봄의 정의(definition), 돌봄의 속성(감정 對 노동), 돌봄정책 또는 복지국가가 여성의 삶에 대해 가지는 함의(여성친화적 국가 對 공적 가부장제), 가족 수당 등 돌봄 연계 현금 급여가 기존의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돌봄의 공적 조직화를 위한 윤리적 기초로서 돌봄과 정의(justice)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장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돌봄에 대한 논의의 국내적 맥락을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모성주의 접근의 대표적 논자인 버지니아 헬드(Virginia Held)²⁾와 자유주의 접근의 대표적 논자인 마르타 누스바움(Martha Nussbaum)³⁾의 논의를 통해 돌봄과 정의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의 특징과 대안적 규범적·윤리적 틀로서의 한계를 검토한다. 4장과 5장에서 각각 에바 키테이(Ever Feder Kittay)⁴⁾와 조안 트론토(Joan Tronto)⁵⁾의 정치적·권력관계 접근이 헬드와 누스바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돌봄과 정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어떻게 가능케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돌봄의 정치적 윤리가 대안적 사회에 대해 가지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2. 논의의 맥락

국내에서 돌봄이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책 의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다. '가족 위기', '저출산 위기' 등 각종 위기담론은 '가족'과 '전통'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에 의해 돌봄 책임을 가족에 전가해 오던 '한국적 복지모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²⁾ Distinguished Professor in the Philosophy Faculty at the Graduate Center of CUNY(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이 글에서 주로 참조한 저서는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200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다.

³⁾ Ernst Freund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of Law and Ethic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 글에서 주로 참조한 저서는 *The Future of Feminist Liberalism*(2000).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74(2): 47-79, *Long-Term Care and Social Justice: A Challenge to Conventional Ideas of the Social Contract*(2002).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다.

⁴⁾ Professor of Philosophy at SUNY, Stony Brook. 이 글에서 주로 참조한 저서는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1999). New York: Routledge.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tardation*(2001). *Public Culture*. 13(3): 557-579. *From Welfare to a Public Ethic of Care*(2001). In Hirshmann, J., Ulrike L.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Can Contractualism Justify State-Supported Long-Term Care Policies? or, I'd Rather Be Some Mother's Child: A Reply to Nussbaum and Daniels*(2002).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다.

⁵⁾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women's studies at CUNY. 이 글에서 주로 참조한 저서는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1993). New York, London: Routledge. *Who cares? Public and Private Caring and the Rethinking of Citizenship*(2001). In Hirshmann, J., Ulrike L.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이다.

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층에 대한 돌봄이 국가의 주요 관심사⁶⁾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국가 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정책 담론은 일자리 창출 또는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새로운 성장전략의 수단으로 돌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돌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둔화, 생산인구 감소 및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라는 탈산업사회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단’으로서 돌봄에 대한 접근은 ‘생산주의’ 틀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이다. 즉, 인간 의존이라는 불가피한 사실(*inescapable fact of human dependency*)(Kittay, 1999, p.16)의 보편성을 암묵적으로 부정하고,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 즉 돌봄관계의 당사자들을 사회적으로 주변화하고 돌봄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온 기존의 사회·정책적 패러다임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효율성, 경쟁력, 생산성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도구주의적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돌봄 활동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허라금, 2005; 허라금, 2006; 조혜정, 2006). 허라금(2005)은 경제적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가치보다 돌봄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키태이(Kittay)의 관계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의 개념을 통하여 제안하고, 돌봄의 공적 조직화를 통해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주변화해 왔던 기존의 삶의 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혜정(2006)은 후기 근대적 국가 공동체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토건국가’적 체제를 벗어나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돌봄의 제도화는 단순히 돈의 분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철학과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자 “사회를 재편하는 방법”(조혜정, 2006, p.89)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현실적으로 쉽게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안이나 사회서비스 전달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좁게는 돌봄을 주고 받는 사람들을 온전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통합하고, 넓게는 점차로 냉혹해져가는 ‘차가운’ 경쟁사회에 대한 대안적 사회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⁶⁾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 등은 모두 돌봄의 문제에 대한 공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안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성주의 접근 내의 차이를 중심적 주제로 다루지는 못했다. 돌봄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 내부의 차이에는 돌봄의 공적 조직화를 위한 실천적·규범적 잠재력의 차이, 나아가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의 방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실천에 대해 가지는 합의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국내의 여성주의 논의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이론적 쟁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돌봄과 정의: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

1) 헬드의 모성주의⁷⁾: 돌봄관계의 가치와 실천적 윤리로서의 한계

(1) 관계의 윤리로서 돌봄윤리

넬 노딩스(Nell Noddings), 사라 러딕(Sara Ruddick)과 함께 모성주의 전통의 대표적 정치 철학자인 헬드에게 돌봄은 관계가 중심이 되는 실천(practices)이자 가치이다. 돌봄은 돌봄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상호배려, 관심에 기반하며, 관계에 내포된 가치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실천이다(Held, 2006, pp.36-43). 돌봄의 관계적 속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헬드는 돌봄윤리가 칸트주의나 공리주의 같은 지배적 도덕이론의 관점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도덕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인간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가정하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기 이전에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돌봄윤리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욕구에 대한 관심, 돌봄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정적 유대를 높이 평가한다. 인간의 진보와 번성(flourishing)은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욕구에 대한 책임은 선택이 아닌 도덕적으로 부

⁷⁾ 모성주의(maternalism)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글에서는 모성주의를 ‘어머니-자녀 관계’모델을 더 넓은 공적 사회관계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론적 지향으로 정의한다. 허라금(2005)은 이 글의 4장과 5장에서 다루는 키테이와 트론토도 모성주의 전통에 있다고 보는 듯하다. 비교의 준거에 따라서는 키테이와 트론토도 모성주의 전통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돌봄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드와 같은 전형적인 모성주의자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된 의무이다. 사회가 서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허구이며, 사람들이 돌봄을 매개로 상호의존하는 방식을 모호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타인의 욕구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해, 감정적 유대보다는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의 이상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Held, 2006, pp.13-14).

(2) 정의에 대한 돌봄의 우선성

헬드는 평등, 비편파성, 공정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의윤리가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기는 하지만, 돌봄과 정의가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돌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이 생애 전반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돌봄관계를 원한다는 존재론적 사실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정의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의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개인의 권리와 상호존중만 있다면 사회에서 신뢰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Held, 2006, pp.68-72). 정의는 돌봄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정의없는 돌봄은 가능하지만, 돌봄없는 정의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Held, 2006, pp.133-135).

관계의 윤리로서 돌봄윤리는 가족, 친구, 공동체와 같은 개인적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민족국가의 정치와 제도를 넘어 세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관심으로 확대(Held, 2006, p.31)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급진적 윤리가 된다(Held, 2006, p.130). 돌봄사회는 돌봄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돌봄 가치에 기반한 실천이 지배적인 사회이다. 권리, 공정성, 평등과 같은 정의윤리의 가치는 법률과 같은 영역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것이며, 사람들은 신뢰, 상호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과 같은 가치를 존중하며 자기만의 이해를 제한적으로만 추구하게 될 것이다(Held, 2006, p.136). 돌봄 사회는 모든 어린이의 욕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경제, 교육, 보육, 의료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사회관계 내에서 구성원들은 권리, 정의, 효용과 같은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는 도덕성의 핵심적 차원이 아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 내에서 경쟁, 자기이해와 권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사회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체계가 잘 기능하려면 이는 돌봄관계의 도덕적 가치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품화와 상업적 경쟁이 허용되는 영역은 최

소화될 것이며, 보건의료, 교육, 미디어, 문화와 같은 영역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영역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영역으로의 시장 확대는 제한될 것이다(Held, 2006, pp.136-136).

(3) 실천적 윤리로서의 한계: 돌봄의 낭만화

돌봄과 정의에 대한 헬드의 모성주의 접근은 그동안 평가절하 되어 왔던 사적영역, 모성, 돌봄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의 시도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의 변혁을 위한 대안적 가치를 제시해 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돌봄 윤리에 기초한 대안적 규범적 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돌봄 관계의 속성,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주장은 돌봄을 낭만화하며, 돌봄을 주변화하는 권력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를 해결하는데 치명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Fine, 2007).

더 넓은 사회관계의 전형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사회제도와 정치 영역으로 돌봄의 가치와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적 관계 모델이다. 어머니-자녀 관계는 양육과 의존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평등한 법적 권리에 기반한 계약원칙보다 상호존중과 관심, 배려, 협력, 신뢰가 더 중요한 관계이며, 헬드는 정의의 가치보다는 이러한 돌봄의 가치가 사회에서 더 지배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이 ‘여성적 모델’은 실제 사회가 어머니-자녀 관계와 같아야 한다고 보다 자기 이해만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관점이 아닌 대안적 사회관계에 대한 은유로서 지배적 도덕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독립적, 자율적 개인의 패러다임을 어머니-자녀관계 패러다임으로 대체한다면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상상해 보자는 것이다(Held, 2006, p.77).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돌봄과 권력의 관계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어머니-자녀 관계를 돌봄 관계의 이상으로 삼는 것은 갈등과 욕구의 대립 등 실제 돌봄 관계에 내재한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돌봄은 헬드가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간의 긴장과 갈등, 대립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도 포함한다(Fine, 2007, p.60). 둘째, 돌봄관계의 전형으로 어머니-자녀관계는 헬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은 불평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이다. 자녀는 어머니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무기력

한 존재이다. 이는 어머니-자녀관계 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와 정치제도가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봄사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헬드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상호 관심과 배려, 감정에 기초한 유대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주지 않는다(Tronto, 2008, p.214). 헬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돌봄관계는 불평등한 관계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의 의지와 타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 돌봄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반응에 의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제 사회에서 돌봄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는지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돌봄이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덜 주목한다. 돌봄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몫이며, 돌봄은 헬드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평가절하 되고 있다(Tronto, 2008, pp.214-215).

결과적으로 헬드의 돌봄윤리는 타인의 욕구에 무관심하고 자기이해 추구적인 사회, 개인들간의 감정적 유대와 교류보다는 추상적인 권리와 원칙에 의해 작동하는 냉정하고 차가운 사회를 성찰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적 가치로서의 전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돌봄을 둘러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어떻게 돌봄사회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윤리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Tronto, 1993; Sevenhuijn, 2003; Williams, 2001).

2) 누스바움의 자유주의: 부정의의 원천으로서 돌봄과 윤리적 개인주의의 한계

(1) 부정의의 원천으로서 돌봄

돌봄의 관계적 속성, 돌봄관계에 내재한 가치를 강조하는 헬드와 달리 누스바움은 돌봄이 제기하는 부정의(unjustice)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헬드처럼 인간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타인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인간존재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점을 전제하지만, 실제 사회가 의존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룸으로써 돌봄은 사회 부정의의 원천이 된다. 모든 인간 존재는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는 가장 전형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며 대부분의 사회는 장기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건강, 교육, 고용, 정치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의존자를 돌보는 사람(특히 여성) 역시 시민권, 취업, 소득활동, 정치참여, 건강상의 제약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Nussbaum, 2002, pp.32-33).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누스바움은 돌봄의 문제를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로 인식한다(Nussbaum, 2002, p.34). 정의로운 사회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되지 않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타인과의 평등 속에서 좋은 삶의 기회를 제공받고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self-respect)받는 사회이다(Nussbaum, 2002, p.39). 누스바움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계약적 관점에 기초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정을 폐기하고 재개념화된다면, 돌봄의 문제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주로 롤스(J. Rawls)의 정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Nussbaum, 2000a, p.48).

첫째, 인간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가정이 인간의 돌봄 욕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이론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존재이며, 사회계약은 이들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계약당사자들은 완전히 협력이 가능한 사회의 구성원(fully cooperating members of society over complete life)이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재화에 대한 욕구를 둘러싸고 경쟁할 수 있는 성인(competent contrasting adults)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돌봄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허구이다. 롤스는 돌봄을 주고 받으며 의존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론의 영역에서 배제한다. 정의론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욕구를 정의의 영역에 통합하려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롤스의 기본재화(primary goods)의 성격이 수정되어야 한다. 기본재화에는 극단적이고 비대칭적인 시기의 돌봄 욕구가 추가되어야 한다(Nussbaum, 2002, pp.43-53).

둘째,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수정하여 기본재화 목록에 돌봄 욕구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이론은 돌봄이 제기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계약이론이 인간을 그 자체 존엄한 존재로 보기 보다는 호혜성(reciprocity)의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는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이며, 인간은 상호 이득을 주는 한에서 존중 받는다. 따라서 호혜적 관계에 참여할 수 없는 의존자들은 사회협약(social cooperation)에서 배제되며, 그 자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변화 될 것이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치는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치제도는 장애인, 유아,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인간 존엄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대칭적 호혜성도 있지만 극단적인 비대칭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Nussbaum, 2000a, p.55)

(2) 공적 돌봄의 규범적 기초: 인간 역량

누스바움은 인간 기능(human functioning)과 역량(capability) 개념에 기초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공적 돌봄의 규범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돌봄과 의존의 문제를 기본재화로 고려하는 정의론의 정치적 목적은 시민들이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⁸⁾을 보장하는데 있다. 기능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이자 선택의 자유로서 역량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곧 인간 존재가 지향하는 가치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의 차이의 중요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아와 금식은 둘 다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기능)라는 점에서 같지만, 금식은 종교적 이유나 다이어트 같은 가치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역량(풍부한 음식물)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먹을 것인지의 기능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것은 임신부와 비임산부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사람이 놓인 조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음식물이나 영양소가 똑같은 건강상태에 놓이게 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수준의 재화가 동일한 기능을 실

⁸⁾ 역량은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서 아마차 센(Amatya Sen)이 개발한 개념으로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은 소득과 부의 양으로만 측정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의 정도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근간으로 한다(Nussbaum, 2000a, pp.54-56). 자원은 인간의 복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능(functionings)과 역량이다.

현하도록 하지 않는다. 역량은 개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개인들이 놓인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 독립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틀 내에 있다. 누스바움이 의존하는 역량접근을 개발한 센(Scn)은 역량을 “사람들이 가치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자유”로 정의하며, 삶의 질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나 소득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역량은 곧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Robyens, 2003, pp.61-62). 누스바움은 돌봄의 정치적 목적이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기능하거나 기능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정책이 시민에게 그러한 역량을 보장하려면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물질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Nussbaum, 2000a: pp.59-63). 존재론적으로 인간의존이라는 보편적 사실에서 출발했지만, 윤리적·규범적 수준에서 역량 접근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 독립을 지향한다. 돌봄이 인간의 보편적 욕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간과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비판했지만, 윤리적으로는 자유와 선택,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3) 윤리적 개인주의의 한계: 돌봄 가치의 주변화

역량접근에 기초한 누스바움의 윤리적 개인주의는 독립과 자유의 가치와 담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많은 부모들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들의 지향점이다. 뿐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의 사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대안적 사회를 위한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한계가 있다.

첫째, 돌봄관계에 내재한 관계 특수적 가치보다 좋은 삶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 모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추상적 가치에 기반함으로써 헬드와 같은 모성주의 관점이 제공해 주는 급진적 사회변혁의 전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에게 타인에 대한 관심, 감정적 유대, 상호배려 등 돌봄의 관계적 측면은 인간의 삶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더 중시하는 지배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돌봄은 헬드가 강조했던 가치를 내포하는 실천이라기 보다는 일(work)이다. 거칠게 해석하자면, 누스바움은 인간존엄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돌봄을 기계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이론상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돌봄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다. 누스바움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돌봄 욕구로 인해 가치있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지 않아야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삶의 계획에서 가치있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헬드는 누스바움이 돌봄관계를 합리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스바움은 "성찰적 돌봄의 규범"(norms of reflective caring)은 사랑이든 애착이든 평등한 상태에서 강요되지 않은 선택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실제 돌봄관계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의무적 관계이며, 불평등한 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애착은 선택에 기초할 수도 없고 기초할 필요도 없다(Held, 2006, p.94).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모든 자녀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 때문만은 아니며, 부모-자녀 관계는 모든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보편적 특성 이상의 특수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헬드는 맹한 돌봄(blind care)보다 누스바움이 제안하는 성찰적 돌봄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돌봄을 우선적으로 개인적 관심이나 선택의 측면에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역량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의 기회를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키테이의 역량접근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 측면이다.

4. 키테이: 공적 지원의 규범적 근거로서 돌리아 원칙

1) 인간의존의 불가피한 사실과 의존의 ‘정상성’

키테이는 누스바움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헬드와 달리 돌봄이 우리 사회에 제기하는 정의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누가 돌봄에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 누가 돌봄관계와 돌봄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지원할 것인지를 문제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조직화하느냐의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Kittay, 1999, p.1).

누스바움처럼 키테이도 롤스의 정의론이 의존 욕구를 정의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완전히 기능하는 자유로운 시민을 이상화한다는 점에서 의존성이 제기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키테이는 특히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전제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정치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누스바움의 윤리적 개인주의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완전히 협력할 수 있는 잘 질서지워진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은 사회협약의 혜택과 부담을 모두 질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의 소유자이다. 즉,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이며,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데 있어 타인의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민이 도덕적 능력을 표현하고 좋은 삶을 추구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임무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들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기본재화가 사회의 기본 제도를 통해 분배될 수 있는 원칙을 토론하고 선택한다.

그러나 키테이가 볼 때, 정신지체장애인은 롤스가 가정하는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재화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도 없다(Kittay, 2001a, pp.563-564). 사회협약의 부담을 공유할 수도 없고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돌봄의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줄 수도 없다. 사회협약의 부담을 생산적 노동을 통한 기여만으로 본다면, 정신지체장애인은 사회협약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관계의 발전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타인에게 제공한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능력, 자신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를 수용한다면 타인과의 관계가 개인성(personhood) 개념의 중심에 포함되어야 한다.

독립과 생산성을 목표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합리성, 호혜적 협력관계에 참여할 능력을 전제로 한다. 독립과 생산성은 타인에 의존하는 사람을 자립적인 개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용효과적이다. 장애인 운동은 독립적으로 살 권리를 추구해 왔고, 이는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비용이 많이 들고, 미래에도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통합, 완전한 존엄, 시민권 주장은 정신지체장애인에겐 적용될 수 없다(Kittay, 2001a, pp.567-570).

이처럼 절대적으로 타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돌봄의 목적을 자립과 독립, 생산성 향상, 비용효과성 등에 두게 되는 것은 의존의 ‘정상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에게 의존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의존만 독립으로 보인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은 허구이다. 이러한 허구의 치명적 효과는 우리의 욕구가 의존관계에서 충족되는 방식을 은폐하면 더 증폭된다. 이러한 허구는 또한 의존을 숨길 수 없는 사람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의존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Kittay, 2001a, pp.567-570). 그러나 의존의 ‘정상성’을 인정하면 의존관계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며 인간은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 있는 상호의존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인간의 의존성은 극복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변성시켜 나가야 할 ‘정상적 상태’이다

2) 호혜성과 돌리아

키테이는 돌리아 원칙(Principle of Doulia)⁹⁾하에 공적 돌봄이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리아 원칙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돌봄을 제공하는

⁹⁾ 키테이에 따르면, 돌리아(Doulia)라는 용어는 산후조리사를 의미하는 둘라(Doula)를 변형하여 만든 조어이며, 그리스어로 노예라는 뜻의 기원을 갖는다(Kittay, 1999).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가 곧 돌리아 원칙에 의해 조직화된 사회이다. 이것은 좁게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간의, 넓게는 사회 전체 속에서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의 순환이라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 (Kittay, 1999, pp.106-109)

정신지체장애인과 같은 절대적인 의존자는 그들이 받는 돌봄을 호혜적으로 되돌려 줄 수 없고, 돌봄 제공자는 그들의 노동에 대해 의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불가피한 의존자를 돌보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롤스의 정의론이 기초하는 계약관계 당사자들간의 호혜성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고 주는 관계에 얽혀 있는 의존성(nested dependencies)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회가 보상해야 한다. 돌리아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는 돌봄이 사회의 중심적 기능 중 하나인 사회이다. 의존자를 돌볼 능력을 지원하는 사회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절대적 의존자가 사회조직의 통합적 일부가 될 수 있다(Kittay, 2001a, pp.573-574).

3) 돌봄의 덕목이 만개하기 위한 조건

키테이는 누스바움이 자유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존을 정치제도와 사회에 더 중심적으로 위치지워야 한다고 비판한다. 누스바움은 키테이와 마찬가지로 의존 육구의 보편성에서 출발하지만, 그의 역량 개념은 선택, 기회, 자유, 독립과 같은 자유주의의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도 사실상 독립적일 수 없는 인간존재의 사실로서 의존을 부정하는 것이다(Kittay, 2002, p.82). 이에 대해 누스바움은 "(키테이처럼) 국가를 보편적 어머니로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사회적 목적으로서 독립을 거부해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오히려 키테이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라고 대응한다. 키테이의 주장대로 누구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누스바움도 인정한다. 독립은 항상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이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시민의 이미지가 될 수는 없으며, 자유와 자신의 삶을 설계할 기회가 말로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다(Nussbaum, 2002, p.57). 누스바움의 이러한 대응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성주의 이론가들이 강조해

왔던 돌봄관계의 가치에 대한 고려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키테이의 돌봄윤리는 좋은 돌봄, 이상적 돌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함으로써 누스바움의 한계를 넘어서는다.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의존관계(dependency relation)가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돌봄노동은 3Cs(Care, Concern, Connection)의 특징을 가진다. 취약한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노동(Care)이며, 사람들간의 유대와 친밀성, 신뢰를 형성하고(Connection), 애정적 유대(Concern)를 만든다. 이 때 돌봄제공자는 자신의 욕구보다는 의존자의 복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의존자의 복리는 돌봄제공자의 책임에 달려 있다(Kittay, 1999, p.31).

키테이는 돌봄을 노동(work)으로 보면서도 비록 유급노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에 대한 관심, 유대, 애정과 같은 태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상황보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돌봄 상황은 실제 돌봄이 조직화되고 이루어지는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키테이는 돌봄제공자와 의존자의 관계로 정의되는 의존관계의 권력관계적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돌봄윤리와 돌봄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비대칭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제공자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권력의 불평등은 의존관계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상적 돌봄 상황에서는 지배관계가 되지 않는다. 지배관계는 어느 일방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돌봄제공자와 의존자 모두가 행사할 수 있다. 의존관계가 지배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돌봄제공자와 의존자 모두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신뢰에 기반할 때 의존관계는 당사자들간의 친밀성, 감정적 유대를 통한 이상적 돌봄 관계가 될 수 있다(Kittay, 1999, p.35). 좋은 돌봄 환경은 돌봄제공자의 측면에서 의존자의 복리에 대한 감정적 투자가 있고 의존자의 측면에서는 돌봄제공자에 대한 신뢰와 감정적 유대가 있는 환경이다(Kittay, 2001c, p.543).

돌봄제공자를 통해 의존관계를 지원하는 돌리아 원칙은 의존자의 복리와 좋은 돌봄의 기반이 되는 의존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의존자와의 불평등

한 관계 속에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기 위해 돌봄제공자는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의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착취적일 수록, 돌봄제공자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록, 강제적 상황에서 노동이 이루어질 수록 의존관계는 지배관계가 되기 쉽다(Kittay, 2001a, p.573). 돌봄 제공자가 착취적이고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면, 의존자는 무관심과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 돌봄의 덕목이 만개하려면 이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4) 일로서 돌봄에 대한 가치평가: 돌봄관계의 탈낭만화

이처럼 키테이의 돌리아 원칙은 돌봄관계에 내재한 가치와 덕목을 포함함으로써 누스바움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 헬드와 같은 방식으로 돌봄관계를 낭만화하는 한계에 노출되지도 않는다.

키테이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종류의 유급노동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봄이 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사회적 위상을 갖고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급휴가, 재해보상, 고용보험, 연금 등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의존노동의 시기가 끝나면 다른 노동과 마찬가지로 재훈련을 받고 적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의존노동이 공정하게 보상받으려면 탈성별화되고 탈인종화되어야 한다. 소년들이 돌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공적으로 지원하고, 남성이 가족 내 의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돌봄노동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남성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 가장 급진적 제안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든 가족 밖에서 이루어지든 의존노동에 관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소득이나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편적 급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Kittay, 2001c, p.544).

키테이는 의존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지원에 대한 두 가지의 반론에 매우 설득력 있게 반박한다. 첫 번째 반론은 헬드와 같은 모성주의자 또는 보수적 가족주의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일이 '사랑의 노동'인데 이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것은 돌봄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키테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를 예로 들면서 우리는 이미 신체와 같이 가치를 평가할 수 없

는 많은 것에 화폐가치를 매기고 있으며,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도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신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Kittay, 2001c, p.545).

두 번째 반론은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것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키테이는 이에 대해 돌봄노동은 항상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비용은 두 가지 이유로 많이 드는데 첫째, 오늘날까지 이 노동이 무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면, 어떤 비용도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은 노동집약적인 노동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돌봄이 기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Kittay, 2001c, p.545). 나아가 키테이는 그동안 의존노동을 다른 유급노동과 공정하게 다룸으로써 돌봄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개인의 복리와 집합체 내의 정의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5. 트론토: 돌봄 가치의 정치화

1) 도덕과 정치의 이원론적 경계 해체

돌봄과 정의의 문제에 대한 트론토의 접근은 돌봄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잃지 않으면서 대안적 사회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게 보아 모성주의 전통 내에 있지만, 돌봄의 정치적·권력관계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그는 "타인에 대한 일상적 돌봄이 인간 존재의 가치있는 전제가 되는 세계"(Tronto, 1993, x)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나 흑인 등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몫으로 전가되고,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작동하는 지배 권력의 효과를 간과하지 않는다. 돌봄과 정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트론토는 두 가지 윤리의 경계를 해체한다.

트론토는 여성주의가 도덕적 주장의 정치적 맥락을 간과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Tronto, 1993, p.2) 돌봄이 포괄적인 권력관계 내에 위치지워지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나아가 돌봄정치(care politics)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돌봄이 정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피셔와 함께 돌봄을 다음과 같이 넓게 정의한 바 있다. 돌봄은 "우리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활동이다. 세계는 우리의 몸, 자아, 환경 등 복잡하고 삶을 지속시키는 그물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Tronto, 1993, p.103).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돌봄은 인간이 세계에서 살기 위해 관여하는 활동(activities)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목적을 가지는 활동이라도 그 안에 돌봄 차원을 가지고 있다. 돌봄은 신체적 활동일 뿐 아니라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엇이든 돌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비판하지만, 트론토에게 이는 돌봄을 주변화하는 사회를 보는 일종의 렌즈가 된다. 서로 다른 활동, 가치, 덕목을 하나의 개념적 틀로 묶음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인간 삶의 측면이 어떻게 중심에서 사라져 배경(background)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과 배경을 구분하는 일종의 이원론적 사고를 통해 배경으로 사라진 삶과 전면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Tronto, 2001, p.71).

트론토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된 돌봄을 통해 인간 이미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문제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합리적, 자율적 개인은 허구가 될 것이며, 돌봄이 인간의 삶에서 중심이 된다면 세계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인간의 속성은 상호의존성으로 전환될 것이며, 현재의 도덕, 정치이론이 어떻게 권력과 특권의 불평등을 유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Tronto, 1999, p.101).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은 돌봄 제공자이자 수혜자로 돌봄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시민은 돌봄 노동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며, 돌봄은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Tronto, 2001, p.71).

2) 과정으로서 돌봄: 가치이자 정치

돌봄이 정치적 맥락 내에 놓인 도덕적 개념이라는 것은 권력이 개입하는 돌봄의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돌봄은 돌봄의 욕구에 대한 관심(caring about), 욕구에 대한 책임(taking care of), 돌봄의 제공(care-giving), 돌봄의 수용

(care-receiving) 등 분석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상호 관련된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Tronto, 1993, pp.105-108).

첫째, 돌봄의 욕구에 대한 관심은 돌봄의 필요를 인정(recognition)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 혹은 특정 집단이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둘째, 욕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욕구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인정하는 단계이다. 욕구충족을 위한 적절한 자원 - 물적, 시간적, 조직적, 인적 - 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욕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셋째, 돌봄의 제공은 돌봄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물리적, 정신적 노동을 통해 돌봄 욕구를 가진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돈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넷째, 돌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돌봄의 수용은 돌봄이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간의 상호과정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돌봄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돌봄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욕구의 인정, 책임, 돌봄 제공 등 이전 단계의 과정이 돌봄을 받은 사람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돌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각 단계는 좋은 돌봄(caring well)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태도와 가치를 내포한다. 돌봄의 필요에 대한 인정은 관심(attentioness), 욕구에 대한 반응은 책임(responsibility), 돌봄의 제공은 능력(competence), 돌봄의 수용은 반응(responsiveness)의 가치를 가지며 이는 도덕적 지향으로서 돌봄 윤리의 핵심이다(Sevenhuijsen, 2003, p184). 그러나 동시에 각 단계는 권력과 갈등을 내포하며, 이는 돌봄이 어떻게 정의되고 제공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집합적 협상과 토론을 필요로 하는 돌봄 정치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이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욕구인지, 다양한 욕구들 중 어떤 욕구가 충족될 가치가 있는 욕구인지에 대한 평가(돌봄에 대한 관심), 인정된 욕구에 대해 어떠한 자원을 어느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돌봄에 대한 책임)은 권력에 의해 구조화되고,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의존한다. 돌봄의 제공과 수혜는 좋은 돌봄을 제공할(받을) 수 있는 조건(물질적, 육체적, 시간적), 제공자가 수혜자 욕구

를 인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 수혜자의 욕구와 제공자 욕구의 우선성(돌봄의 제공과 수용)의 측면에서 각각 이전 단계의 결정에 의해 정치적 과정에 노출된다. 욕구는 종종 제공자인지 수혜자인지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며 협상과 논쟁의 대상이며 누가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권력투쟁의 대상이다. 권력과 특권은 돌봄을 주고 받고 말하고 듣는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관계는 성별, 계급, 인종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적 삶에서 차지하는 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진다(Sevenhuijsen, 2003, p138).

3) 돌봄정치의 속성: 욕구해석의 정치

정치적으로 개념화된 돌봄은 구체적인 맥락 내에서의 돌봄정치를 필요로 한다. 돌봄과정에서 단계별로, 각 단계간에 작용하고 있는 권력을 인식하고 좋은 돌봄, 이상적 돌봄, 나아가 돌봄이 주변화되지 않는 대안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돌봄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돌봄이 주변화된 사회에서 욕구의 결정은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욕구와 책임에 대한 결정은 돌봄을 정의할 수 있는 권력과 특권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현재 돌봄의 조직화는 돌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 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돌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타자화'되고, 의존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얻게 된다. 반면 돌봄을 정의할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돌봄은 가시화되지 않으며, 이들의 돌봄 책임으로부터의 회피는 특권화된다.

이것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용어에 따르면 '욕구 해석의 정치(politics of need interpretation)'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돌봄 정치는 그동안 돌봄 욕구의 정의로부터 타자화, 주변화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합하는 정치이며, 인간의 삶에서 지배적인 돌봄을 주변화하는 권력과 특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주변화된 사람들은 특권화된 집단과의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만 욕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비로

소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Tronto, 2001, p.68).

4) 돌봄의 정치적 가치

모든 인간이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은 보편적이지만,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된 돌봄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것인지는 돌봄 과정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맥락에 의존적이다.

이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욕구상황이란 없으며, 돌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 좋은 돌봄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정당화할지의 문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돌봄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 문제가 아니며 삶의 질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욕구를 경험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한 정의, 돌봄의 질에 대한 문제는 항상 논쟁적이다. 좋은 돌봄이라는 것은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세븐휴이젠은 돌봄을 정치적 방식으로 개념화 한 결과 제기되는 이러한 돌봄 욕구의 맥락성은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란 것은 결국 특정한 상황에서 주장을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특별한 욕구와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 상황적 맥락과 가능한 행위의 결과가 고려되는 도덕적 추론의 개방성은 '좋은' 또는 책임있는 정치의 불가피한 요소가 된다(Sevenhuijsen, 2003, p85). 따라서 돌봄은 권력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치의 이상을 제공하는 정치적 개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돌봄은 정치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박탈된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기능한다. 결국 돌봄은 민주적 시민권의 실천이다.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의, 민주적 개방적 토론 기회, 권력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요구한다. 돌봄을 주고 받는 실천이 일상화되면 더 도덕적 인간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은 민주적 시민이 될 수 있다(Tronto, 1993).

6. 종합적 논의와 맺음말

이 글은 과거와 달리 돌봄이 정치적 행위와 협상의 주제가 되고 있는 돌봄 재편기에 돌봄과 정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대안사회의 규범적·윤리적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돌봄 윤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제기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주의 여성주의자들이 재조명 해 온 돌봄관계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헬드의 모성주의 접근과 자유주의 틀 내에 있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은 모두 돌봄과 정의의 가치를 구분하고 어느 한 편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각각 실천적, 규범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키테이의 돌리아 원칙과 돌봄 가치 자체를 정치화 하는 트론토의 논의가 대안적 사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돌봄 윤리로서 보다 적절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키테이와 트론토 모두 단기적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돌봄의 활동과 가치가 주변화되지 않는 대안적 사회 -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적·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삶의 가치가 개인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사회 - 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모성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키테이의 돌리아 원칙은 돌봄의 권력관계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돌봄을 낭만화하지 않으며, 돌봄 가치 자체를 정치화하는 트론토의 접근은 돌봄에 대한 본질주의적 정의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돌봄이 중심이 되는 대안적 사회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돌봄 욕구로 인해 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참여와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키테이와 트론토 논의가 주는 보다 인상적인 함의는 무엇보다도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누스바움의 자유주의적 주장과의 대비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누스바움과 유사하게 돌봄의 부정의에 주목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사회적·정책적 지향점으로 삼지 않는다. 의존이라는 인간존재의 불가피한 사실, 인간의 삶에서 돌봄의 중심성이라는 존재론적 의미 뿐 아니라 돌봄의 실천에 내재하는 가치 - 타인에 대한 관심, 책임, 배려, 신뢰 등- 의 윤리적 차원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의존을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하지 않는다.

키테이가 제안하는 사회정책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온 개인의 독립과 선택의 자유보다는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감정적 유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독립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키테이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돌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감정적인 상호의존과 신뢰감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돌봄을 주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각각의 개인적 독립과 자유가 정책의 초점이 되면, 돌봄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간의 욕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갈등과 대립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돌보는 유급 노동자는 자신의 자립을 위해 임금, 노동시간 등 더 나은 노동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보육비용을 낮추고자 할 것이며, 보육교사는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할 것이다. 이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반대로 신뢰와 감정적 유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규범적 기초하에서 키테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돌리아 원칙에 기초하여 가족의 안과 밖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의 의존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돌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덕목이 인간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전제하므로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의 독립을 위한 지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게 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역시 그의 개인적 차원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된다(Kittay, 2001a, p.575). 많은 이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사회가 바로 의존과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키테이의 논의가 돌봄제공자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간의 관계가 지배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상태인 불균형적 권력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의 방향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에서 권력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화되거나 덜 발달된 듯하다. 파인과 글렌디닝은 키테이의 논의에서 권력관계로서 돌봄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정

교해 지려면 세력화(empowerment)의 한 형태로서 권력(저항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힘이 아닌)을 의미하는 역량(capability)¹⁰⁾으로서 권력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즉, 권력은 타인에 대한 지배(power over)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거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power to)이다.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의미있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불가피한 의존성을 관리하고 관계적 맥락에서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Fine and Glendinning, 2005).

필자는 키테이가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논의가 트론토의 정치적 과정으로서 돌봄 개념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키테이의 논의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의 상호의존성, 나아가 인간의존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사회정책, 복지국가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적 구성요소들을 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트론토는 이러한 주장이 기존의 정책 담론에서 어떻게 부정되고 주변화되는지, 왜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즉 돌봄, 돌봄에 내재한 가치들이 사회정책에서 어떻게 주변화되고, 배제되며 무엇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들을 제공해 준다(Kathryn, 2004).

무엇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욕구이며, 욕구 충족을 위해 자원을 어느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 누가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동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지배 권력은 돌봄을 공적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부적절한 ‘사적인 일’이며,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하는,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노동¹¹⁾이며, 지속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할 생산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무능력자’로 정의해 왔다. 돌봄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주변화와 배제 이면에는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급노동자만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며, 시민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돌봄과 돌봄의 속성에 대한 정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의 맥락 내에서 작용한 지배 권력의 효과이다. 그러나 이제 탈산업사회적 맥락에서 돌봄에 대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정의는 점차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돌봄의 욕구로 인해, 돌봄 책임으로 인해 사회에서

¹⁰⁾ 파인과 글렌딩이 사용하는 역량 개념은 누스바움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역량 개념과 다르다.

¹¹⁾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속성을 누가 정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배제되어 왔던 이들의 돌봄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돌봄 정치는 단순히 돌봄을 둘러싼 욕구 충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동안 사회에서 주변화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정치이며, 민주주의의 실천 그 자체이다.

자기이해, 경쟁, 경제성장, 생산성, 효율성 등 날로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지배 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 감정적·정서적 유대, 상호배려의 가치를 담고 있는 돌봄 역시 냉혹한 경제의 논리에 종속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돌봄 노동,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수단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전략 같은 정책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해, 돌봄 제공자가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동 뿐 아니라 몸도, 지나 온 삶의 이야기도 상품으로 흡수해 버리는 무소불위 시장의 지배 속에서 돌봄이 일자리가 되고, 산업이 되는 것이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점차로 우리가 익숙해지고 둔감해져야 할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필요한 것은 돌봄 윤리에 기초한 대안 사회에 대한 전망이며, 이를 위한 정치적 실천이다.

■ 참고문헌 □

- 조혜정 (2006).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차가운 근대 cold modern'에서 '따뜻한 근대 warm modern'로. *사회과학논집*. 37(1): 71-97.
- 허라금 (2005). 성 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21(1): 199-231.
- 허라금 (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22(1): 115-145.
- Daly, M.,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2): 281-298.
- Fine, M. D. (2007). *A Caring Society?: Care and the Dilemmas of Human Servi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ine, M., Glendinning, C. (2005). Dependence, in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Revisiting the concepts of 'care' and 'dependency'. *Ageing and Society*. 25: 601-602.
- Held, V.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thryn, E. (2004). Dependency, Justice and the ethic of care. Hartley, D. eds. *The Ethics of Welfare: Human rights, dependency and responsibility*. Bristol: The Polity Press.
-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Kittay, E. F. (2001a).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tardation. *Public Culture*. 13(3): 557-579.
- Kittay, E. F. (2001b). From Welfare to a Public Ethic of Care. In Hirshmann, J., Ulrike L.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 Kittay, E. F. (2001c). A Feminist Public Ethic of Care Meets the New Communitarian Family Policy. *Ethics*. 111: 523-547.
- Kittay, E. F. (2002). Can Contractualism Justify State-Supported Long-Term Care Policies? or, I'd Rather Be Some Mother's Child: A Reply to Nussbaum and Daniels.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orld Health Organization.
- Nussbaum, M. C. (2000a). The Future of Feminist Liberalism.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74(2): 47-79.
- Nussbaum, M. C. (2000b). Women's Capabilities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Human*

-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2)*: 219-247.
- Nussbaum, M. C. (2002). Long-Term Care and Social Justice: A Challenge to Conventional Ideas of the Social Contract.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orld Health Organization.
- Robeyns, I. (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 61-92.
- Sevenhuijsen, S. (2003). The Place of Care: The Relevance of the Feminist Ethic of Care for Social Policy. *Feminist Theory*, *4(2)*: 179-197.
-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London: Routledge.
- Tronto, J. C. (2001). Who cares? Public and Private Caring and the Rethinking of Citizenship. In Hirshmann, J., Ulrike L.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 Tronto, J. C. (2008). Book Review: The Ethic of Care. *Hypatia*, *23(1)*: 211-217.
- Williams, F. (2001). In and beyond New labour: towards a new political ethics of care. *Critical Social Policy*, *21(4)*: 467-493.

Political ethics of care: beyond dualism between care and justice

Ma, KyoungH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and justice has begun to attract feministic theorists' attention. Without neglecting the early feminists' attention on exploitative and suppressive reality that care had brought, feminists have now become interested in how to conceptualize ethics of care with more positive aspects. Along with this issue, feminists have also started to seek ways to suggest alternative society and social policy with regard to 'care'.

While the maternalist approach pays more attention to values inherent in the practice of care and care itself than justice, the liberal approach tends to emphasize justice by focusing on unfairness of the situation where carers(especially women) are constantly exploited and people in needs of care are marginalized. However, separation of views on care and justice is bound to reach the limit in suggesting appropriate social norms and ethics for alternative society.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ualism of care and justice, care has to be located in the context of power relations at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levels, and this kind of political ethics only is able to provide alternative norms for care.

Key words: care, ethics of care, care policy, social policy, caring society, care and justice

◆ 2010.11.4. 접수 / 2010.11.29. 1차수정 / 2010.12.8. 게재확정

* Ph.D in Sociology,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mkhee@kwidmail.re.kr)